焦点

脫 不況으로 가는 길

車 軿 權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敎授〉

Ⅰ. 全般的인 景氣局面

韓國銀行이 발표한 올해 1월중 景氣豫告指標는 지난 12月과 같은 0.9에 머물러 오는 2·4분기에도 國內景氣는 沈滯에서 벗어 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79년 下半期부터 沈滯局面에 접어들기 시작한 國內景氣는 80年의 심한 不況을 거쳐 지난해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나 4·4분기에 들어 회복세가 일시 鈍化되는 움직임을 보인 이래 좀처럼 뚜렷한 景氣回復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에 들어 物價가 안정됨에 따라 實質流動性공급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國內景氣가 沈滯局面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投資와 消費 등 內需와 輸出이 부진하여 生産活動도 계속 低調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1월중에는 消費財生産이 두드러지게 惡化되었는데 이는 2年이상 계속된 不況때문에 所得이 감소되어 消費需要가 크게 萎縮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總通貨와 源金銀行貸出金은 크게 늘어 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景氣動向은 生産, 消費, 投資 등 實質的인 經濟活動이 모두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輸出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輸出信用狀來到額 증가률도 지난해 9월이래 계속 減少勢를 보여 올 上半期중 景氣가 회복될 전망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0년대에 두차례의 石油波動을 겪은 世界經濟는 아직도 세가지 不確實性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하나는 石油供給 및 油價에 관한 不確實性이고 다른 하나는 「인플레」 再燃의 가능성이며 그밖에 世界的인 不況이 長期化하고 더욱 深化될 가능성이 그것이다.

올해 들어 産油國의 油價引下 「러시」가 고조되어 世界經濟의 景氣回復에 매우 밝은 전망을 가져다 주고 있다. 油價의 계속적인 下落은 先進工業國의 經濟成長을 촉진시키고 「인플레」를 진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先進國經濟의 회복을 통한 世界貿易의 확대로 開途國에도 밝은 전망을 가져다 주게 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油價引下는 輸入石油依存度가 높은 開途國에도 「인플레」壓力의 감퇴, 貿易赤字의 감축 등을 통하여 安定成長基盤을 회복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이 올해에 들어 油價引下 「러시」가 생겨 나게 된 것은 다시말할 것도 없이 73年 이후 지속적인 油價暴騰에 대처하여 石油消費國의 石油消費節約과 石油備蓄이 적극 촉진되었던 반면 産油國의 增産이 계속되어 이미 80年 여름 단계에서 石油供給過剩狀態가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일부 專門家들이 우려와 경고를 동시에 표명하고 있듯이 「油價下落에 陶醉하거나 自滿에 빠져 방심하게 되면 80년대 후반에 또 다른 石油波動에 휘말려 들어가게 될 危險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3월

6일에 石油輸出國機構의 주요 會員國石油相들은 石油供給過剩으로 인한 油價下落에 대처하여 産油量의 감축에 의해 基準油價體制를 고수하는데 合意하고 이를 公式化하도록 決定한 바 있으나 이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石油供給의 不安定性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減産策이 「市場狀況에 따라 더욱 縮小 調整」될 우려도 없지 않다는 點에서 石油供給과 油價에 관한 不確實性要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80년 9월에 일어난 「이란·이락」紛爭이 보여 주고 있는 것과 같이 中東이 지니고 있는 政治에 不安定은 항상 石油의 安定供給을 교란하게 될 또 다른 要因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음에 世界的인 景氣沈滯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인플레」가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그러한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오늘날 先進諸國이나 開途國이 모두 80년에서 81년에 걸쳐 발생한 제2차 石油波動에 유래하는 物價上昇에 대처하여 「인플레」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緊縮政策과 高金利政策을 계속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景氣沈滯와 生産不振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生産諸國의 失業情勢는 매우 악화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美國의 失業率은 이미 2차대전후 최고수준인 9%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올라 갈 것으로 관망되고 있으며 歐洲主要國에서도 81년에 失業率上昇이 가속화되었다. 즉 82년 1월말에 英國은 11.8%, 西獨은 7.5%, 佛國은 9%, 「벨기에」는 13.1%를 각각 기록하였으며 各國에서 緊縮政策 완화와 緊縮政策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高金利의 인하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올해에 들어 國際原資材價格도 지난해에 이어 하락세 내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世界的인 景氣沈滯의 長期化로 需要가 감축된 反面에 일부 非産油資源保有國들이 國際收支 赤字의 보전을 위하여 原資材의 輸出을 촉진하게 된 데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異狀氣候로 인한 農業不振으로 農産物價格이 騰貴할 가능성을 논외로 하드라도 石油資源과 같이 資源保有國의 資源保存指向으로 需給이 핍박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와 함께 油價에 관한 不確實性이나 各國의 生産性上昇率이 경향적으로 低下되는 가운데 賃金上昇率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등도 「인플레」재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최근에 발표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연구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美國 등 西方主要國의 同時的 緊縮政策이 계속될 경우 그 상승적 「디플레」效果가 확대되어 不況이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美國의 선도적인 景氣指標는 지난 1월에도 0.6%가 떨어져 작년 4월이후 계속 下落勢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美國의 景氣後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러한 美國經濟의 회복에 대한 不確實性은 先進國經濟의 본격적인 景氣回復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各國의 緊縮강화로 景氣後退壓力을 더욱 증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先進國經濟가 82년 上半期中 미약한 回復勢를 나타낸 후 82년 下半期부터 본격적인 景氣回復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國際高金利의 향방이 不確實하고 先進諸國과 産油國(OPEC)間의 輸出入展望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본격적인 回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더우기 英國의 國民經濟社會研究所의 修正展望(82년 2월)은 先進工業國의 올해 平均成長率이 지난해보다 낮은 1.2%에 머물고 83년에 가서야 완만한 回復勢를 되찾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世界經濟는 아직도 「인플레」재연의 가능성과 景氣沈滯의 심화 가능성을 다 같이 피해야 하기 때문에 올 下半期에 回復勢를 나타내더라도 그 힘이 매우 미약한 상태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우리 經濟를 둘러싸고 있는 海外經濟環境이 오는 下半期에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 그리 밝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經濟의 景氣展望도 낙관할 수 만은 없을 것 같다. 다

만 經濟企劃院이 82年 經濟運用計劃에서 展望하고 있는 것처럼 輸出環境의 악화속에서도 國內物價 및 賃金의 安定에 따른 價格競爭力 회복으로 輸出이 계속 늘고, 內需面에서도 「秋穀生産回復에 따른 農村購買力 증대와 物價安定에 따른 消費心理의 回復」등으로 民間消費가 늘어나고 投資活動도 점차 늘어 날 것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輸出의 꾸준한 신장과 內需回復으로 景氣回復勢가 「좀더 폭 넓게 各部門에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經濟는 현재 世界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不確實性에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의 景氣沈滯와 物價上昇으로 생겨나게 된 잠재적인 不安要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즉 不況과 物價上昇으로 인한 實質賃金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賃金引上壓力, 누적된 企業赤字를 보전하기 위한 價格引上의 가능성, 不動産景氣의 활성화를 빙자하는 「인플레」期待心理, 通貨供給增大와 換率引上에 대한 壓力, 그리고 財政赤字 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올 下半期의 國內 經濟展望은 본격적인 景氣回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점진적이고 꾸준한 回復勢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신중한 經濟活性化施策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Ⅱ. 經濟活性化施策의 方向

經濟發展의 原動力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民間經濟의 活力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0~70年代에 우리經濟가 高度成長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궁극적으로는 家計(勤勞者)와 企業의 活力이 계속 유지되고 향상시킬 수 있었던 데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다. 그리하여 脫不況의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 먼저 家計나 企業의 經濟活動을 活性化시킬 수 있는 유리한 與件과 誘因을 마련하여 주는 일이 最優先課題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實物經濟팀」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새 經濟內閣의 탄생과 때를 같이하여 經濟活性化措置를 중심으로 하는 當面經濟對策을 마련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巨視經濟的인 總量指標가 아니라 企業이나 家計 등 微視經濟部門이 처하고 있는 당면한 經濟現實에 입각하여 脫不況의 活路를 마련하여 줄 것을 고대하여 온 國民의 輿望에 부응하고자 하는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새 經濟內閣의 출범과 함께 脫不況을 위한 획기적인 政策轉換과 景氣의 好轉을 기대한 企業이나 家計에 대하여는 지난 1월 14일에 발표된 經濟活性化措置가 아직도 흡족한 느낌을 주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 있어서도 아직 內外景氣展望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不安要因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의 재연과 不況의 심화를 다 같이 회피하면서 經濟를 活性化시켜야 한다는 制約條件下에서는 經濟活性化措置의 選擇範圍가 매우 협소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投資나 消費 등 國內需要가 沈滯를 지속하는 가운데 輸出도 부진하여 産業生産마다 위축되는 不況局面에서 民間經濟의 活力을 回復시키기 위한 處方이란 企業이나 家計의 經濟的 成果(Performance)가 개선될 수 있는 與件의 조성과 誘因의 마련에 귀착되기 때문에 政府가 선택할 수 있는 政策手段은 일정한 限界를 갖일 수 밖에 없고 또 마술과 같은 재주도 부리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政策手段이든 그 有效性은 適用하는 時期와 當面課題에 대한 對應性 그리고 誘因效果의 크기 등에 따라 평가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經濟活性化施策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이 經濟活性化를 위한 施策이 物價安定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制約條件도 있어 그러한 條件의 충족여부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새 經濟內閣이 제시한 1·14 經濟活性化施策의 주요내용을 보면 企業이나 家計 등 個別部門에 대한 課題別로 상당히 다양한 對應策이 마련되어 있다. 원래 景氣浮揚을 위하여 政府가 할 수 있는 일은 財政, 金融政策을 통하여 景氣를 자극하는 일이지만 그러한 施策은 보통 公共事

業 등의 早期執行과 住宅建設의 촉진, 民間設備投資의 촉진, 輸出의 촉진, 金利의 引下 등에 의하여 執行된다. 그런 점에서 새 經濟內閣의 經濟活性化施策도 그러한 政策「原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課題別 經濟活性化施策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종전과 달리 政策運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方針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需要가 沈滯되고 있는 部門의 回復을 자극하되 物價面에서 問題가 생겨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한편 景氣의 착실한 回復에 필요한 資金은 공급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企業의 收益性 제고, 企業資金負擔의 경감, 그리고 企業活動을 저해하는 制度的 要因의 완화 내지 폐지에 의하여 生産性의 向上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政策運用의 方針은 總需要管理政策이 成長通貨의 공급까지도 억제함으로써 經濟의 回復을 어렵게 하는 고식적인 政策運用에 대한 反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經濟를 回復시키되「인플레」없는 지속적인 成長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短期的인 需要管理政策만이 아니라 「中長期的인 관점에서 生産性을 向上시키고, 生産能力을 확대하는 한편 經濟構造의 彈力性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供給管理政策의 필요성에 대한 認識에 연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物價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總需要管理政策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지만 緊縮政策의 擴大는 필연적으로 民間活動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政府의 각종 規制조치도 民間活動과 그 誘因을 저해하는 要因이 된다. 따라서 物價安定下에 經濟를 活性化시키기 위하여서는 總需要抑制策이나 政府의 規制때문에 생겨 나는 經濟構造의 硬直性을 완화 내지 해소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企業資金調達「페탄」이나 資金事情의 季節的 要因을 고려하여 通貨管理를 신축적으로 運用할 方針을 밝힌 것은 企業에 적절한 成長通貨를 공급함으로써 資金難때문에 生産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政策運用方向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우 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選擇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의 鎭靜化를 위해서나 또는 景氣浮揚을 위하여 財政支出이나 稅制가 담당하고 있는 機能의 重要性(直接, 間接의 需要效果)에 비추어 보아 財政手段에 의한 景氣調整의 각종 時差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制度的인 措置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데 景氣過熱期에는 일정한 政府收入을 準備金(基金)에 산입하여 이를 동결하고, 景氣停滯期에는 準備金(基金)을 인출하여 經濟活性化에 충당하는 景氣調整準備金 내지 基金制度나 民間設備投資에 대하여 直接 補助를 지급하는 投資補助金制度 등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公共投資計劃의 조기집행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不況期에 어느 때나 工事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計劃案을 마련하여 두는 方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稅制를 통한 經濟의 活性化方案도 投資稅額控除制度나 關稅 등의 徵收猶豫措置만이 아니라 所得稅 및 法人稅의 彈力稅率 活用에 의하여 稅負擔을 경감시켜 주는 적극적인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그밖에 現 美國의 Reagan行政府가 대대적으로 實施하고 있는 것과 같이 個人所得의 대대적인 減稅에 의하여 勤勞 投資 貯蓄意欲을 촉진시키는 한편 減價償却制度의 簡素化 加速化에 의하여 企業活動의 活性化를 도모하는 問題에 대하여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設備投資와 硏究開發投資의 촉진을 위하여 특히 中心企業의 育成과 地域開發과의 關聯下에서 英國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施策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즉 中心企業에 대한 輕減稅率의 적용, 中心企業 産業用建物에 대한 初年度 全額償却制의 실시, 失業率이 높은 특정지역(영국은 都市)에 있어서의 投資에 대한 각종 租稅의 免除(英國은 土地開發稅, 財産稅의 全免, 工業, 商業建物의 建築에 대한 初年度 全額償却)등이 그러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施策은 景氣의 活性化만이 아니라 中長期的으로 볼 때 企業의 投資意欲 회복과 生産能力의 확대 및 生産性向上을 촉진하기 위한 供給能力의 확대와 개선에도 기

여하게 된다.

Ⅲ. 새 經濟內閣에 대한 期待

우리는 지난날의 高度成長過程에서나 또는 不況下에서도 綜合的인 經濟的 成果(performance)와 微視經濟部門의 經濟的 成果間에 있어서 적지 않은 乖離을 느껴 왔다고 할 수 있다. 經濟全體의 成長率과 經濟各部內 내지 個別部門의 成長率이나 經濟的 成果는 당연히 차이를 갖기 마련이고 또 消費者物價指數의 動向과 消費者가 피부로 느끼는 物價의 움직임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經濟의 量的擴大와 輸出의 획기적인 增大에 상응하여 民間經濟의 活力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國內的 條件은 마땅히 크게 개선되어야만 「인플레」나 不況을 다 같이 이겨 낼 수 있는 經濟의 體質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意味에서 우리 經濟의 企業과 家計 등 微視經濟部門의 經濟的 成果는 合足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企業間의 競爭강화에 의하여 生産性을 向上시키고 對內外與件變化에 대한 適應能力의 배양에 의하여 지속적인 設備投資의 확대와 革新을 추구함으로써 經濟發展을 供給面에서 뒷받침하는 企業에 成果가 不足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所得水準의 획기적인 上昇에도 불구하고 家計의 貯蓄率이 크게 높아지지 못하였던 것도 微視經濟部門의 經濟的 成果가 미흡하였던 것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새 經濟內閣에 우선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總量的인 成果와 微視經濟部門의 成果간의 乖離를 해소시키는 데 注力하여 무엇보다 먼저 우리經濟의 體質을 강화 개선함으로써 民間經濟의 活力을 회복 향상시켜 달라는 데 귀결될 수 밖에 없다. 脫不況을 위한 妙策이나 획기적인 政策이란 事實上 있을 수 없으며 脫不況을 위한 현명한 國民的 努力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이고 신중한 需要管理策과 중장기적인 供給管理策을 조화시켜 나가는 일이 급선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특히 「인플레」期待心理를 불식하지 못하였던 過去의 經濟運用이나 金融部門이 財政의 주름살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總需要管理策의 운용, 그리고 「큰 政府」指向的인 각종 規制의 확대 등에 대한 反省과 적절한 改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이는 이같은 諸要因 때문에 「인플레」나 不況에 약한 우리經濟이 體質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색하여야 할 脫不況의 길은 不況에서 즉각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不況期를 통하여 不況의 原因, 특히 構造的 諸要因을 하나하나 개선함으로써 不況을 극복하는 方法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微視經濟的인 側面에서 企業과 家計가 지니고 있는 脆弱點과 當面問題를 하나하나 찾아 내서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일만이 民間經濟의 活力을 되찾게 하는 첩경이 된다고 생각된다. 새 經濟內閣은 모두 企業經營의 제1선에서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微視經濟部門의 취약점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人士들이라는 점에서 總量指標와 微視經濟的 成果간의 乖離를 좁히는 데나 金融과 財政의 책무를 적절히 정하는 데에 있어 現實對應的인 姿勢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政策運用에 있어서도 試行錯誤의 여지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民間經濟의 效率과 活力을 經濟全體에 파급시키는 새로운 轉換點을 마련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싶다.

우리經濟가 活力을 되찾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착실한 景氣回復을 통하여 企業經營者등 經濟主體의 未來에 대한 信賴感을 회복시키는 일이 긴요한 課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成長過程에서 景氣變動이 불가피하드라도 設備投資에 대한 企業의 危險負擔을 극소화시키는 한편 企業間競爭을 통한 生産性向上에 의하여 生産費用의 上昇分을 吸收함으로써 價格安定을 실현하면서 企業利潤을 확보하고 나아가 賃金引上도 가능케 하도록 하는 企業의 收益性 제고와 産業合理化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고 하겠다.

이같은 현안에 대하여도 착실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